

# GLOBAL TRENDS

## 세계지방자치동향

### 일본

»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부과와 녹지 늘리기 계획

### 미국

» 오클라호마시티 대도시 지역 프로젝트 계획(MAPS 3 & 4)

### 미국

» 미국 주요 도시의 PILOT 제도 비교

### 미국

» 노스캐롤라이나 지방 소비세 균등화 정책:  
Local Sales Tax Pooling and Allocation

### 프랑스

» 삶의 질과 지속가능 가치 실현을 통한 세수 확대

### 한국

» '디지털 자산 시대의 조세 정의'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

### 한국

» 국민주권 시대 주민 삶의 질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





# ‘디지털 자산 시대의 조세 정의’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

## 1. 징수 사각지대의 해소: 가상자산 징수의 필요성과 제도화

-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익명성, 탈중앙성,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며, 전통적인 세무 행정 체계로는 포착과 관리가 어려운 자산 유형에 해당함
- 2020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sup>1)</sup>하면서 이를 자산 은닉과 체납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 체납 관리 체계는 금융계좌와 부동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실체가 분산되고 실명 인증이 불완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추적과 처분이 어려움
- 이러한 한계는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게 새로운 탈루 수단을 제공하고, 조세 집행력을 저하함으로써 성실납세자 간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을 더 이상 제도 밖 자산으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응할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과제임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지방세 체납 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징수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함
-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세 체납 관리의 현실 적합성과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됨

## 2.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주요 내용 및 협업 체계

### 도입 배경

- 「지방세징수법」상 재산조회권과 압류권은 존재하나, 가상자산에 대한 실효적 집행수단이 부재했던 현실에서, 디지털 기반의 자산 추적·징수 수단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기술 기반 방식

- 경기도는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징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휴대폰 번호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자산 거래 시 사용된 본인인증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의 계정 매칭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익명성이 강한 가상자산에 대한 실질적 식별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징수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체납자에 대한 전자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

1)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 5,000달러에서 2021년 7만 달러로 급성장하였고, 비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2020년 900억 달러에서 2021년 1조 달러로 급상승하였음 (최순영, 2022)

### 시스템 연계 방식

- 경기도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자의 계정을 조회하고, 예치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행함. 이 과정은 자치단체와 거래소 간 표준화된 업무처리 협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제도적 정합성과 기술적 실행력을 함께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의 연계 협약을 통해, 실시간 계정조회 → 자산 예치금 압류 → 추심 절차 진행

### 행정효율성 제고

-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체납자 보유 자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해당 기간이 15일 내외로 단축되었으며, 계정 적발률도 약 40% 향상되는 성과를 기록함. 이는 징수 행정 전반의 시간·비용 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디지털 기반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한 정책적 사례로 주목됨

## 3.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주요성과

### 세수 확보 실적

-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압류·징수하는 기반을 확보함
  - 2023년 기준 체납자 4,537명 적발(1,556명 압류하여 48억 원 징수)
  - 2024년 하반기(9~11월) 집중 체납처분 기간 동안 206억 원 압류, 이 중 34억 원 징수

### 행정효율 제고

- 가상자산 기반 체납자에 대한 징수 행정은 기존 방식 대비 시간과 행정 자원의 투입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은닉 자산에 대한 실질적 대응 역량도 강화됨
  - 가상자산 체납자에 대한 대응 시간 단축(평균 6개월 → 15일)
  - 계정 적발률 약 40% 향상

### 제도 확산 및 정부 평가

- 경기도의 선제적 도입 사례는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목받으며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짐
  -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 국내 시·군 외,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 4. 시사점

- 경기도의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한 지방세 체납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서, 조세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음
- 첫째,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체납 징수 대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 보호라는 공공 재정의 기본 원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둘째, 단순한 정보화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징수 행정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집행력과 행정 대응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압류·추심 기간 단축, 적발률 향상 등은 징수 실효성을 수치적으로 입증한 결과임
- 셋째, 이와 같은 체계는 재정의 자립성과 자주재원 확보 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가능하며, 기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세원을 행정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함
- 넷째, 경기도 사례는 거래소 협력, 정보 연계, 업무 표준화 등에서 범정부적 협업과 정책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기존 과세체계로 포섭되지 않았던 자산 유형에 대해 시대 변화와 기술 혁신을 반영한 과세체계 설계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세제도의 지평을 연 사례로 평가됨
-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징수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며, 향후 지방세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참고문헌

- 경기도청 보도자료. (2024.2.22.) 국내 최초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 경기도청 보도자료. (2025.01.02.)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206억 원 압류. 체납액 34억 원 징수
- 최순영.(2022).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이슈보고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12.30.)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결과 공개

**유보람** 부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boram3884@kriia.re.kr